

“국민우려 불식·공급대책 논의” vs “부동산 정책 정상화”

〈興〉

〈野〉

興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 10·15 선동 도 넘어… 의견수렴 행보
野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꾸려 반시장·비정상적 정책 적극 대응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로,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시스

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10·15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등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

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TF 구성 안건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위원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TF에선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

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원장이 부위원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정책위원장이 맡는 것과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계속되는 ‘김현지’ 논란… 김동연 “중차대한 국감서 무슨 의미 있나”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9일차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서 의혹 재등장
김동연 “오래전 퇴직한 공무원일 뿐”

법사위, 판사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野 “개인적인 일로 발부 사례… 유감”

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울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



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으며 “선거 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 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며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

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보도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이 무엇이고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을 낼 생

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군의 직원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일 여야 위원들이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음주소동’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李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행사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

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해외자원 개발에 ‘자본잠식·혈세낭비’ 비판

산자위 국정감사

‘지속가능 모델 구축’ 필요 목소리
수익보다 손실 더 커… 공기업 위험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

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박태홍 기자